

다산포럼



주 윤 정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인도네시아에서 맞는 해방 80주년, 벅찬 마음이다. 아체의 평화 20주년 기념 국제 평화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석하기 위해 와서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마침 인도네시아도 해방 80주년을 맞아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다.

인도네시아 국제선 입국장에서 도착 비자를 받기 위해 줄이 길어지자 옆에 있던 서양인 남자가 짜증을 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만 오면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우리 아시아인들은 당신들 백인이 약탈해 세운 나라에 갈 때마다 늘 그런 취급을 받아왔다”고 한 마디 해 주고 싶었지만 긴 비행에 지쳐 참았다. 독립하지 못했던 굴종과 굴욕을 당했던 것으로 여기며 살았을 것이다. 우리는 독립했고 우리는堂堂하게 꿈을 펼치고 산다.

최근 해외에 오면 한국은 태평성대라는 생각을 한다. 지난날 모로코 세계사회학회에서 만난 레바논, 이란, 우크라이나 학자들로부터 공습과 폭격으로 친구,

인권, 민주주의, 평화, 법치

친지, 이웃들이 겪는 끔찍한 참상의 이야기를 들었다. 인도네시아만 해도 파푸아 같은 지역은 여전히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아체는 평화가 정착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조코 위도도 정부가 과거 아체에 벌어진 중대한 인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진실 규명·사과·회복 조치는 아직 요원하다.

아체의 젊은 학자·교사·활동가들은 한국에 관심이 많다. K팝과 드라마의 영향도 크지만 그 밑바탕에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관심과 존경이 있다. 한 인권 변호사는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정의를 요구할 수 있었는가”를 물었다. 한국은 법치 수준이 높기에 가능하지만 자신들의 상황에서는 어렵다고도 했다.

나는 여기서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다. 한국어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나라가 된 것은 특별해서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왔기 때문이다. 불의와 억울함을 참지 않고 계속 싸워가게 가능했다. 그리고 “우리도 해냈으니, 당신들도 할 수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적 공감을 얻고 한·일 외교 문제까지 되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싸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과거 가부장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성폭력 피해 고백은 개인과 가족의 수치로 여겨졌다. 이 아픔을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기 위해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피해자와 신뢰를 쌓고 안

전한 공간을 만들었으며 그들의 목소리에 사회가 귀 기울였다. 기록은 시민 연대로 이어졌고 하나의 움직임은 또 다른 운동으로 확산됐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민주주의는 전진하기도 후퇴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퇴보의 시기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증언 채록, 민주시민교육, 1인 시위, 장기 농성 등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맞섰다. 고통의 목소리를 듣고 폭력을 기억했으며 사회는 연대했다. 그 힘이 모여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고 지켜내고 있으며 그 힘으로 망상적 쿠데타도 막아냈다.

지금 동남아시아 곳곳에서는 군사주의가 강화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미얀마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에 젊은이들은 비관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의 사례를 보며 “우리도 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품을 수도 있다.

전쟁과 독재로 어려웠던 시절, 세계의 많은 친구들이 우리를 도왔다. 다시바로 세운, 다시 만난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인권·평화 중심의 공적개발원조(ODA), 평화 교육, 인권·평화 리더 양성과 연구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작은 노력이 모여 우리의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만들었듯이 흔들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다른 미래를 만들 세계의 친구들을 계속 사귀며, 우리의 싸움과 경험을 어떤 이야기로 풀어낼지 머리를 쥐어짜야겠다.

기 고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세 가지 오해



설 명 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내가 낸 연금, 나중에 못받는다는데 왜 내야하죠?” 청년층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고용은 불안정하고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현실 속에서 수십년 뒤 받을지도 모를 연금은 그야말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국민연금은 믿을 수 없는 제도일까? 과연 우리가 지금 외면해도 괜찮은 것일까?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이다. 1990년대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톨도 못 받는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과 청년층으로부터 이러한 오해가 더욱 커져왔다. 과연 못 받는다는 게 사실일까?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의 원인은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56년 도에 기금고갈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하는데 설명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올해 3월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기금소진 시기를 늦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장돼 있으며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연금급여를 안정적이고 지

속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연금은 초기에 기금을 쌓아두는 적립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이후에는 현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를 그때의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에 투자로 많은 손실을 봤다는데’라는 오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총 885조원이고 이것으로 기금을 운용하여 낸 수익은 총 756조7000억원이다. 연금지급 등으로 지출한 404조4000억원을 빼고도 현재 남아있는 기금은 1237조3000억원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2년 연속 최고의 기금운용 성과를 달성했는데 2023년에는 126조7000억원, 2024년에는 역대 최고인 159조7000억원의 수익을 냈다. 참고로 작년 수익금인 160조원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4.9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2023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1%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금 적립금도 2023년에는 1000조원을 찍고 2024년에는 1213조원으로 급상승하여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해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오히려 연금이다’이다. 매월 200~300만원 정도 받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 지급액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1999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아직

은 제도의 성숙 기간이 짧아 많이 받는 수급자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 받는 분은 88만 9000명, 월 200만원 이상 받는 분은 7만7000명으로 고액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개인 최고 연금액 319만 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의 평생 소득으로 만들 수 있고 노후를 잘 대비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평생 지급되는 종신연금이다. 단지 원금 대비 수익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고 수명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어떤 금융 상품도 이렇게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누구나 60세 이후의 자신을 완벽하게 그릴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노후는 오고 은퇴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그 시간을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적 절차이고 저축이나 개인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 장수 리스크를 커버하기 어렵다.

특히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청년일수록 공적연금의 보호망이 더 절실하다.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정치권의 개혁 의지도 약해지고 장기적으로 더 큰 불이익이 청년세대에 돌아올 수 있다.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에 대한 논의와 방향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기 고

‘괴물폭우’가 던진 경고…안전을 다시 설계할 때



박 종 원
전남도의원(담양1)

지난 7~8월, 전남·광주를 덮친 전례 없는 폭우는 우리 지역 사회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7월 19일 밤 10시 기준, 담양 봉산면에는 540.5mm, 그리고 나주·함평·광양·구례·무안 등 전남지역 곳곳에 400~600mm의 기록적인 강우가 단기간에 쏟아졌다. 인명 피해는 물론 도로·주택·농지·산가가 침수되고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참혹하고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졌다.

담양 고서면에서는 도로가 잠겨 차량이 고립돼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고서중학교는 임시 휴업을 해야 했다. 담양읍은 폭우와 정전이 겹쳐 상점과 가정이 장시간 불편을 겪었으며 무정면 오래전 제방이 유실됐다. 봉산면·월산면·수북면·대전면·금성면 등 저지대 농경지 수백 헥타르가 침수됐다.

담양 이외에도 전남의 피해는 농녕이처럼 크다.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전남 전 지역이 한 곳도 빠짐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당시 상황이 눈에 선하다. 수해 현장의 아픔과 고통, 복구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회성 재해가 아닌 우리 사회가 다는 외면할 수 없는 ‘기후 위기 시대의 경고’이다. 기상청조차 ‘괴물 폭우’라는 표현을 쓰며 기존 예측 모델이 무력화됐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특히 하천과 지류가 많은 담양은 하상도로·둔치주차장·지하차도·농경지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 이상 불가항력의 자연 재난이 아닌 예견된 인재(人災)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번 폭우에서 드러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배수 인프라의 취약성과 하천 관리 시스템의 노후화이다.

담양 지역 내 소하천과 지천은 평상시에는 생태 관광지로 기능하지만 집중호우 시에는 순식간에 범람 위험이 커진다. 구조적 배수 용량 부족, 준설과 유지관리 미비로 급류에 취약한 실정이다. 담양 봉산면·금성면 주민들은 제방 붕괴와 염류 가능성이 수년간 우려됐으나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하상도로와 둔치주차장 등 하천과 맞닿은 공간은 평상시 유희공간으로 활용되지만 집중호우 시에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지대가 된다. 이를 위해 지능형 수위 감지 시스템, 사전 자동 통제 시스템 등의

ICT 기반 실시간 대응 체계 도입과 기존 배수 펌프장과 우수관로의 용량 확대도 시급한 과제이다.

아울러 농촌지역 배수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 저지대 농지의 경우 배수로 확장, 관정·저류지 조성, 스마트 배수 통제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이번 폭우로 고서면·무정면 농경지는 배수시설 미비로 막대한 피해를 입